

충남연구원, “현장에서 일구는 사회적경제” 출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에 사회적경제를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던 주체들의 활동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 책에 가감없이 담

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구는 사회적경제’를 발간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말이다. 충남현장총서 시리즈의 네 번째로 발간된 이번 책은 충남도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공공적 활동이 시작된 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들인 성과에 대해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탄생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충남도의 사회적경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에 이르렀는지 공공과 민간의 협력 활동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책은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의 김종수 상임이사와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지훈 연구원을 비롯한 충남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현장활동가,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8명이 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그 동안 몸담았던 다양한 조직과 관련 사업들을 현장감 있게 기록하고자 했다.

이번 책은 1장-충남 사회적경제 형성과 변화, 2장-민관거버넌스 이야기, 3장-민간 중간지원 조직 이야기, 4장-현장 당사자 조직 이야기, 5장-충남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마다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을 실었다.

특히 저자들은 “사회적경제를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충남의 사례는 성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찾으려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소의를 밝혔다.(그물코 출판사, 203페이지)

충남연구원 ‘중국동향과 진단’ 제10호 발간

- 충남 대(對)중국 전략, 선택과 집중 필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은 ‘선택과 집중’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발간한

‘중국동향과 진단’ 제10호(격월)에서 충남연구원 박인성 연구위원은 “충남경제는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취약점

연구원소식



▲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동향과 진단' 제10호 표지

이 드러나고 있다”며 “중국 내 전략적 파트너 지구를 선택해 집중적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내 정진지 지구(베이징-톈진-허베이)가

중요한 내수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가 최근 마련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기초로 실현 가능한 지역별, 유형별 사업을 모색해 양국 간 교류 축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중국동향과 진단’ 제10호에서는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과 현대중국의 이해(장정, 長征) 등이 실려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과 MOU 체결

- 국가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하 충남연)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유재일), 충북연구원(원장 정초

시)과 13일(목) STEPI 중회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청권 지역의 연구기관 간 연구·교육협력, 지식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와 파트너십 구축에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지역혁신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사업 추진, △교육 및 훈련, 연구협력을 위한 인력 상호 교류, △지식정보의 상호 활용을 위한 정보·DB 등의 교류,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내·외 행사 공동 개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STEPI는 우리나라 지역혁신연구 경험과 성과가 매우 뛰어난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충청권 지역 연구기관들의 연구 노하우와 결합된다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충청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4개 기관은 협약식과 함께 ‘지역기반 지식 트라이앵글: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기념 포럼도 가졌다. 혁신플랫폼으로서의 세종과 대전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충청권 과학기술역량에 기반한 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했다.



충남연구원-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발전 MOU 체결



▲ 협약식 사진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과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진찬우)은 10월 18일 통계센터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역 맞춤형 신

규통계 개발 및 확산, 지역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 분석 연구, 상호 정보 교류 및 자료의 공동 활용 등 ‘지역통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충남연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뢰할만한 지역 통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계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이 활발해져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안전충남 이슈브리프’ 제2호 “지진위험지도 구축과 내진대책 강화해야” “생활 속 지진방재교육·훈련 필요”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7일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과 대응방향 및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 〈안전충남 이슈Brief〉 10월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강남대학교 김근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지진 해일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피해대책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매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 위험지도에 기반한 피해예측과 효과적인 내진대책 추진”을 강조하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 역량이 시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규모 5.1 이상 발생한 지진은 총6건이었으며, 그중 4건이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지진이다. 충남은 1978년 10월 7일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적이 있다. 이때 인명 피해는 물론 문화재 소실, 건물 약3000동 파손 또는 균열이 일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진대응 및 복구체계와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지진대응 매뉴얼과 피해복구 체계 마련 및 생활 속 체험형 지진교육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 돗토리대학 라 정일 교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진대응 정책을 소개하면서 “자연재해는 속성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재 훈련이나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은 방재, 복지, 환경의 범주를 포함한 종합적 방재여야 하며, 그래야만 평상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

한 관심과 자연 재해 발생의 원인을 공유하는 합리적 대응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고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진대응 및 재난 담당관의 역할 강화는 물론 타 지역이나 유관기관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뿐

만 아니라 피해지역의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상담 등 심리지원단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 코너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면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충남연구원 기획조정연구부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ni.re.kr

